

# 지방세 60년만에 대수술...세목 16개 → 9개로

### 도축세·농업소득세 폐지...취·등록세 → 취득세로 부가세·법인세 일부 지방세 전환, 세수 확대 추진 '수정신고제·경정청구제' 도입, 납세자 권익 보호

행정안전부가 25일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은 현행 지방세법을 3개 법으로 분리해 전문화하고 복잡한 지방세 세목을 간소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1949년 제정된 현행 지방세법이 근 60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

기존 지방세법 가운데 총칙 분야는 지방세 기본법, 세목은 지방세법, 비과세와 감면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각각 분리된다.

행안부는 또 지방세법에서 지방세 세목을 현재 16개에서 9개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세목 체계를 간소화함으로써 납세나 징수 비용을 줄이겠다는 게 행안부의 복안이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동일 세원에 대한 중복 과세 문제가 제기돼온 ▲취득세와 취득 관련 등록세를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를 재산세로 각각 통·폐합하기로 했다.

또 유사 세목인 ▲면허세와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를 지역지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통합하는 한편 ▲도축세와 농업소득세는 폐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등에 부가되는 목적세인 지방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되 지방 교육재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현행 전출규모와 동일한 수준으로 교육비특별회계를 보전할 계획이다.

그러나 주민세, 사업소세, 담배소비세, 레저세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행안부는 이번 세목 간소화를 통해 도축세 539억원과 농업소득세 72억원 등 연간

■지방세 세목 간소화 방안

구분	현행(16개)	통·폐합안(9개)
중복과세 통·폐합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재산세
유사세목 통합	등록세 중 취득무관 및 정역분, 면허세	등록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역지원시설세
목적세 정비	자동차세, 주행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본세에 통합
현행유지	주민세, 사업소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주민세, 사업소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폐지	도축세, 농업소득세	폐지

611억원의 세금을 줄이고, 세목 통합에 따른 납세 비용과 징수 비용을 연간 1천354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도축세와 농업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들은 세율도 그대로 통합되기 때문에 납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행안부는 이번 개편에 이어 국제인 부가 가치세와 법인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면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현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담배소비세와 레저세를 지방소비세로 통합해 9개 세목을 7개로 간소화하는 2단계 지방세 제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편안은 이의 세역을 적게 또는 많이 신고한 경우 바로잡을 수 있는 '수정신고제'와 '경정청구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취득세에만 적용되던 '기한 후 신고제'를 도입, 납세자가 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지자체가 세금부과를 고지하기 전에는 다른 세목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성실 납세자에게 체납 처분을 늦추는 '체납처분 유예제'를 신설하고, 3차례 이상 체납자에게 적용되는 '관허(官許)사업 제한' 기준을 체납액 500만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 “또 강만수냐”

### ‘종부세 6억→9억원 상향 밀어붙이기 주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과세기준 6억원→9억원 상향 조정'을 주도한 주인공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사실 과세기준 9억원 상향 조정은 강 장관이 주도했다"면서 "처음에는 정부 내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강 장관이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들도 이 같은 사실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종부세 입법예고안이 강 장관의 '작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 내에서는 "또 강만수냐"는 강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하기로 했던 종부세 입법예고안에는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은 없었으며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금감면이 주요 내용이었다는 것.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 22일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당정협의 과정에서 과세기준 9억원 상향 조정을 비롯해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등 강도높은 안이 나왔다.

앞서 기획재정부도 일부 언론에서 '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될 것'이란 보도가 나오자 "과세기준 상향조정은 검토대상이 아니다"면서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물론 당 입각에서는 강 장관이 청와대와의 '교감'을 거친 뒤 총대를 맨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패키지 딜'을 염두에 둔 협상용이라는 분석인 것.

어쨌든 강 장관이 여론의 반발을 결정적으로 초래하고 있는 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조정을 주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당 내에서는 강 장관이 고관을 정책 실패에 이어 또 다시 '악수(惡手)'를 둔 게 아니냐는 부정적 반응이 우세하다.

# 참여정부 5년간 농어가 부채 급증

### 농가 50.5%, 어가 97.6% 늘어

참여정부 5년간 가구당 농가 부채는 50.5%, 어가 부채는 97.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물식품부가 25일 국회 농림수산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구당 농가 부채는 지난 2002년 말 1천989만8천원에서 2007년 말 현재 2천994만6천원으로 5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부채는 ▲2003년 2천661만9천원 ▲2004년 2천689만2천원 ▲2005년 2천721만 원 ▲2006년 2천816만1천원 등 꾸준한 증가

세를 보였다.

어가 부채도 같은 기간 1천749만4천원에서 3천440만7천원으로 96.7%나 증가했으며, 역시 ▲2003년 2천983만6천원 ▲2004년 3천254만4천원 ▲2005년 3천453만1천원 ▲2006년 3천442만2천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가구당 농가 소득은 같은 기간 470만원에서 3천196만7천원으로 30.6% 늘어나는 데 그쳤고, 어가 소득 역시 같은 기간 2천181만6천원에서 3천66만8천원으로 40.6% 증가에 그쳐 소득에 비해 부채 증가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 퇴직급여 제한 공무원, 5년새 42% 늘어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5년간 각종 비리 등으로 해임 등의 징계를 받아 퇴직급여가 제한된 공무원이 4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25일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에 제출한 '공무원 퇴직급여제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급여제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1천439명으로 2003년 1천12명에 비해 42%가 늘었다.

2004년에는 1천188명, 2005년에는 1천

285명, 2006년에는 1천377명으로 연도별로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으로도 2003년 141억원에서 2004년 181억원, 2005년 204억원, 2006년 215억원, 지난해 219억원으로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와대 등 중앙부처 공무원의 퇴직급여가 제한된 경우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62명, 74명, 78명, 83명, 85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이 의원측은 밝혔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 있다. 이날 의원총회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해 열렸다.

# 靑 입김에 반대 → 찬성 급선회

### 한나라 초선 모임 “종부세 개편 반대” ...오늘 최고위서 결정

한나라당 지도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포함한 정부의 종부세 완화안을 일단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당론 확정까지는 고비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전날 종부세 문제와 관련, 긴급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은 26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최종 당론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이 긴급 실시한 의원 설문조사에서도 70% 정도의 의원들이 정부안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오후 벌어진 의원총회에서 '원안론'과 '수정론'이 팽팽히 맞서면서 양측의 긴장이 고조됐다. 적지 않은 의원들이 '국민 정서를 고려해 종부세의 '점진적 개편론'을 역설한 것이다.

공개발언에 나섰던 안형환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정서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부 원안에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는 것이다. 현기환, 정육임 의원도 "여론이 안 좋다"며 "점진적으로 (개편)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남경필, 권영진 의원은 "시기적응으로 빠르다"는 시기상조론을 폈고, 신지호 의원은 "정부 원안을 보완해야 한다"며 수정을 주장했다. 안경률 사무총장 역시 기자들과 만나 "지금 하는 것은 시기가 아니다"며 단계를 적,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입장을 반영, 권택기·김선봉·김성식·김성태·신성범·정대근·주광덕 의원 등 한나라당 개혁성향 초선의원들의 모임인 '민본 21' 이날 성명을 통해 "종부세의 조세체계상 문제점에 불과하고 이번 기획재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대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안으로, 그 원안 수용은 어렵다"며 정부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반면, 의총에서는 이명박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정부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백성운, 현경봉 의원은 공개발언에서 "원안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수희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를) 바로잡겠다는 대통령의 원칙이 확고하다"며 "원안대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 무안 - 광주(황산, 구화산) 무안공항 직항 전세기

### 무안 - 장사(황가계, 황가계) 무안공항 직항 전세기

\* 공항 주차장 무료이용

\* 개인 차량의 만족도를 주는 **관주MBC 문화여행** 상품입니다(www.kjnet.co.kr)

**"기존의 여행 상품과 차원이 다릅니다"**

**무안-광주 직항 전세기**

무안-광주 직항 전세기 4월 4일 ~ 4월 5일

4월 4일 ~ 4월 5일 ₩ 283,000 / 4월 5일 ~ 4월 6일 ₩ 198,000

무안-광주 직항 전세기 4월 4일 ~ 4월 5일

4월 4일 ~ 4월 5일 ₩ 620,000 / 4월 5일 ~ 4월 6일 ₩ 585,000

**무안-장사 직항 전세기**

무안-장사 직항 전세기 4월 4일 ~ 4월 5일

4월 4일 ~ 4월 5일 ₩ 620,000 / 4월 5일 ~ 4월 6일 ₩ 585,000

관주MBC 문화여행

관주/전남 북 유영여행사 ☎ 문의 062-226-8070